

제226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 결 안 건 (226차 -03)

2022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주요정책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2023. 3. 24.



국무조정실

목 차

I. 점검 개요	1
II. 점검 결과	3
III. 향후 계획	10
[참고1]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
[참고2] '22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개요	13

I

점검 개요

□ 점검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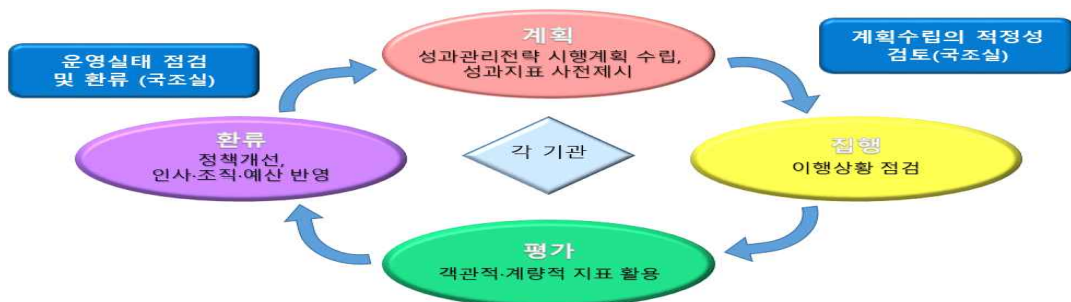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평가의 적절성 등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5조
-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제도 개선방안 도출, 우수사례 공유 및 미흡기관 컨설팅 등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추진

성과관리 제도 개요

- 중앙행정기관(46개 부처청)은 업무성과·정책품질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관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시행

- **성과관리** : 기관의 임무, 중·장기 및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정평법 제2조)
- **자체평가** :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 (정평법 제14조)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 점검대상 : 46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5, 차관급 21)

□ 점검방법

- 부처 제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확인 점검('22.2.15~3.10)
 - △전략목표 성과분석의 충실성(8점/100점), △제도 운영 우수사례(5점/100점) 두 지표의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이 전문가팀을 구성, 별도 점검
-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병행

□ 세부 점검항목 및 지표

점검항목	점검지표	측정내용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절성 (28)	① 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목표체계간 연계성 및 관리과제 설정의 적절성(8) 성과관리 목표별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5) 환류체계 등 관련 계획의 체계성(5)
	② 계획수립 노력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 등 충실성(5)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 노력(5)
상반기 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22)	③ 상반기 점검의 충실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자체점검 내용의 충실성(2)
	④ 자체평가의 적절성 확보 노력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확보 노력(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확보 노력(6)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확보 노력(4)
	⑤ 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결과 원인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충실성(6)
환류의 적절성 (20)	⑥ 환류의 적절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개선 및 인사·조직·예산 반영도(10) 성과급 및 성과연봉 반영도(8) 성과관리 제도 간 연계 노력(2)
성과 제고노력 (30)	⑦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7) 성과관리 역량강화 및 체계 확산 노력(5)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의 충실성(8) * 행정연
	⑧ 기관 성과 달성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평가(주요정책) 결과(5)
	⑨ 제도운영 우수사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사례(5) * 행정연
정책분석 활성화 노력(가점)	정책 분석 활성화 노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정책분석 과제발굴 협업 노력(1) (가점) 정책분석 개선이행 충실도(2)
합계	총 9개 지표	100점(+3)

총 평

- 정부업무평가법상 성과관리·자체평가제도 운영의 기본 취지가 부처 스스로가 업무성과 및 정책품질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데 있음
 - 부처가 운영중인 성과관리·자체평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운영을 잘한 기관이 정책성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됨
 - 전반적으로, 제도운영 우수 기관은 금년도 특정평가(주요정책부문) 결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부단위 5, 청단위 3)
 - 특히,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적이 3년 연속 우수 기관인 국토부와 산림청의 경우, 금년 특정평가(주요정책부문) 결과도 모두 우수함

제도운영 우수·미흡기관 (직제순)

구분	장관급	차관급
우수	과기부, 농식품부, 국토부, 교육부, 환경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산림청
보통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보위, 국조실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미흡	기재부, 고용부, 여가부, 방통위	인사처, 국세청, 새만금청, 원안위

- '22년도부터 부처별로 자체평가결과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 기관 내부 '경쟁의 선순환' 구도 확립 및 분위기 혁신
 - * 미흡·부진과제 개선계획 수립 → 자평위 검토·보완 → 상반기 자체 점검 → 성과평가 반영
 - '21년도 전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결과(총 관리과제 수 1,980개), 624개의 미흡·부진과제(5~7등급) 중 393개(63%)가 평가등급이 상승
 - 또한, 3등급 이상 상승한 과제 수도 141개(35.9%)에 달하는 등 기관의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집중 관리로 정책성과 향상

① 성과관리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의 적절성)** 대부분 기관이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장관급 23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 수립

* 39개 기관이 국정과제를 부처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에 100% 연계 (평균 99.3%)

- 성과관리 목표체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간 연계성과 체계성 점검결과 39개 기관에서 '우수' 이상(5점 척도, 4점이상)으로 나타남

* **사례** (과기부) [비전] '미래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19대 성과목표-81개 관리과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

- **(계획 사전검토)** 모든 기관에서 성과관리 계획수립 시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기관 내부 조직원의 의견도 수렴

* **사례** (보훈처) 성과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심도있는 검토 추진

- ▲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사전검토기간 14일 부여 ▲ 자평위원 및 전문가의 검토의견 137건 중 95건 수용(69.3%) ▲ 각 소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 ▲ 성과목표별 현장의견 반영 계획 검토 및 민간전문위원 검토의견 부서 안내 등(총 7회)

- **(성과지표 설정)** 대부분 기관이 최상위 목표인 전략목표에 대해 국민체감도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설정해 대표성을 확보

* **사례** (농진청) 전략목표가 추구하는 결과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반영,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지표, 국제평가지수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해 객관성 확보 등 전략목표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충족

전략목표	성과지표	비고
I.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한다.	(농업기술) 산업재산권 실용화율(%)	국제평가 지수 (IMD)
II.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주요 농축산물 평균 농업소득률(%)	국가승인 통계
III.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농업기술 확산으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	농촌생활 종합만족도(점)	국가승인 통계

- 또한, 다수 기관에서 성과지표 POOL을 구축하여 지표 이력 관리, 성과지표의 질적 고도화, 신규지표 발굴 등 추진 중

* **사 례** (문화재청) 과제별 예비 핵심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 관리과제 신규지표에 대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성과지표 등 전략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컨설팅, 조직 성과관리 TF 구성·운영을 통한 지표 개선 등 노력

* **사 례** (환경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개선 및 목표설정 근거 합리화 등 성과지표 개선·보완 노력

- 다만, 성과목표 성과지표 중 ▲도전적 목표치 설정 비율은 다소 감소
▲관리과제 복합 성과지표*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단순 합산한 지표

※ ▲도전적 목표치(%) ('20) 70.0 →('21) 84.1 → ('22) 78.6 ▲복합지표(%) ('20) 18.4 →('21) 16.6 →('22) 17.5

② 자체평가의 적절성 등

- **(적절성 확보 노력)** 쏠 기관에서 평가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위원 자문과 내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수용성 제고
-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상의 주요 계기시마다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정착
- **(평가의 객관성·충실성)** 자체평가위원 설문조사 결과, ▲자체평가 절차가 공정하고(95.3%) ▲결과가 타당하다(95.4%)고 인식하고 있었음
- *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 심의·의결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82.8%) ('23.2월, 전 부처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 **(평가지표 관리)** 일부 기관은 정책수요자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 만족 수준을 조사하여 자체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 중

* **사 례** (산림청) 국민 체감도 조사 실시(일반 국민 2천명 + 산림정책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청 365멘토단 180명 대상) → 국민 체감도 배점(10점) 부여, 특히 전년대비 상승 정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등 체감도 개선에 노력

사 례 (국토부)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모든 성과관리과제에 대해 만족도 조사 실시,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조사결과 보고서 담당부서와 공유, 차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 등 피드백 강화

- **(자평위 운영)** 다수 부처가 성과관리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환류에 자평위를 적극 활용, 민간위원 전문성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자체평가위원 대상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23.2.16~2.23, 행정연/한국리서치)>

- **(자평위 역할)** ▲부처가 평가위원의 제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84.9% → **86.6%**)
▲위원회가 부처와 독립적·자율적으로 평가함(94.8% → **93.6%**)
- **(평가 활성화)** 운영실태 우수기관 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이 있음(81.8% → **83.0%**)
- **(제도개선 건의내용)** ▲평가지표 등 평가방법 개선(**25.6%**), ▲인력·시간·보상 등 평가자원 확충(**15.4%**) ▲평가위원의 의견 반영 및 피드백 활성화(**13.2%**) 등

- 다만, 많은 기관에서 위원회 구성시 대학교수·연구원 등 특정직업군에 편중되거나 일부기관은 장기간 연임 관행이 지속됨

* 대학교수가 위원회 구성의 다수를 차지, 소방청 80%, 복지부 73% 등

** (국방부) 4회 이상 연임위원 8명(위축, '21.6월)으로 차기 자평위 구성시 개선 권고

③ 환류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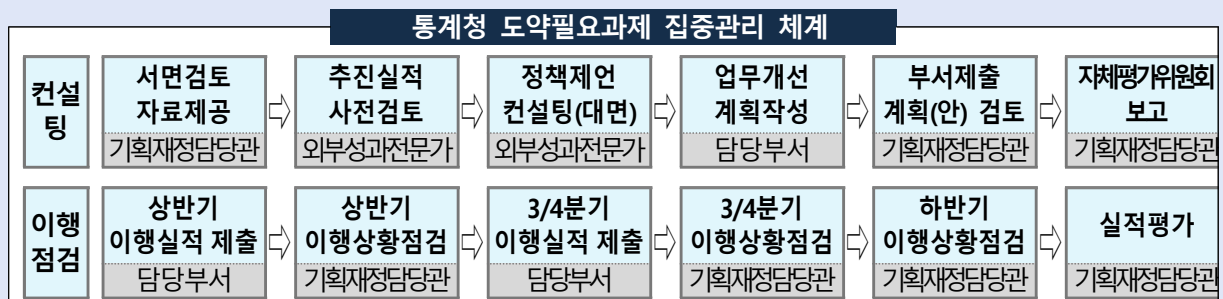
- **(정책개선 반영)** 대부분 기관에서 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피드백하고 있으며, 차관급 기관이 장관급 기관보다 충실히 반영함

* '점검 및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항목 점수(총 10점, 장관급 7.88, 차관급 8.60)

- 일부 부처는 자체평가 부진과제 관리강화 방침('22.3월, 정평위)에 따라 부진과제를 적극 개선·보완하는 체계적인 과제관리로 성과 창출을 유도

* **사례** (농식품부) 대학교수·연구원 등으로 전문 컨설팅팀을 구성 : '21년도 자체평가 미흡 부진과제 대상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여 대상과제(7개)가 '22년도 평가시 모두 등급 상승

* **사례** (통계청) '도약필요과제' 집중관리체계 구축 : 외부전문가 실무형 컨설팅(1차 서면, 2차 대면)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5개 과제 중 4개 과제의 평가등급 향상(2등급 상승 2개, 1등급 상승 2개)



- **(미흡·부진과제 개선 성과)** '21년도 전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결과 (총 관리과제 수 1,980개) 미흡·부진과제(5~7등급) 624개 중
 - 1등급 이상 상승한 과제 수는 총 393개(63%)에 달하는 등 개선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또한, 3등급 이상 상승한 과제 수도 141개(35.9%)에 달하는 등 기관의 미흡·부진과제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

구분	계	1등급 상승	2등급 상승	3등급 상승	4등급 상승	5등급 상승
미흡부진과제 중 개선된 과제 수	393 (100%)	148 (37.7%)	104 (26.5%)	78 (19.8%)	48 (12.2%)	15 (3.8%)

- 특히, △디지털정부 정보자원관리혁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공공훈련 강화 등 10개 기관 15개 과제의 경우, 5단계 상승, 성과관리가 탁월한 사례로 나타남

< 5단계 등급 상승 과제 >

부처명	과제명	'21년 등급	'22년 등급
행안부	디지털정부 정보자원관리 혁신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	7	2
	지방세 제도개선 운영을 통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7	2
	가축전염병 대응역량 강화	7	2
고용부	취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공공훈련 강화	7	2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완화	7	2
기재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7	2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6	1
산업부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안전기준 정비	7	2
	전기기기 및 이차전지 등 전자산업 생태계 조성	6	1
환경부	환경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술개발 활성화	7	2
	도시지역 생태계 서비스 제고	7	2
외교부	투트랙 기조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반 구축	6	1
문체부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6	1
보훈처	침전 기념사업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책임 강화	7	2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의 효과적인 관리	6	1

- ☞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 성과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2년도부터 부처별로 미흡·부진과제 집중관리체계 도입
 - 기관 내부에서 '경쟁의 선순환' 구도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

- **(성과급 반영)** 모든 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직급에는 미반영하는 기관*이 있어 개선 검토
 - * 고용부, 여가부, 중기부, 관세청 등
- 반영률은 권고기준(30%)을 상회하는 33.6%로 전년과 유사하고, 우수기관은 보통·미흡기관보다 성과급 반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최근 3년 비율(%) : ('20) 33.7 → ('21) 34.4 → ('22) 33.6

<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 성과급 반영률(%) >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	보통기관	미흡기관	평균
자체평가 결과의 성과급 반영률	37.1	31.8	33.1	33.6

* (반영율 높은 기관) 병무청·기상청·새만금청·해경청(50% 이상)

- **(개인·부서 평가 연계)** 다수 기관이 개인성과 평가(근무성적평정, 직무성과평가 등)와 연계하고, 우수 부서·개인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 (산림청) 성과 우수기여자 개인표창 실시(15명) 및 인사가점(0.3점) 부여

4 성과 제고 노력

- **(기관장 노력)** 기관장이 직접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목표 달성도 점검 등 적극 참여한 기관일수록 성과관리 운영 수준이 높음

* **사례** (보훈처) 기관장이 ▲ 자체평가 우수부서 직접 격려 ▲ 성과관리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 미흡과제 대응방안 마련 등 성과관리에 대한 노력 지속

사례 (통계청) 성과관리 전 과정을 기관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 확보로 ▲ 자체평가위 참석(3회) ▲ 신규위원 위촉식, 간담회 ▲ 평가 관련 및 성과점검회의 주재, ▲ 성과관리 관련 기관장 결재 20회 등

 - 차관급 기관이 장관급 기관보다 기관장의 자체평가위원회 참여도 및 관심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임
 - *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총7점) : 장관급(4.62점), 차관급(5.08점)
- **(역량강화 노력)** 일부 기관은 성과관리 과제 컨설팅, 자체 성과관리 개선 연구용역 등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 노력 경주

* **사례** (환경부) 환경부 성과관리 이해 교육 추진('22.10.25(1단계), '22.12.24(2단계)) : 성과관리 개요 설명, 실무자 중심의 성과관리 고도화 방안(성과지표 개발 방법 등)

사례 (보훈처) 적극행정과 성과관리 강화 외부강사 직장교육 실시(11.22) 및 기관장의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와 자체평가 실효성 확보에 대한 당부 등 성과관리 지속 독려

- **(전략목표 성과분석)** ※ 행정연에서 각 기관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분석
 - 다수 기관이 성과지표 설명·측정산식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장애요인·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 반면, 일부기관은 성과지표의 과거 실적치가 부정확하거나, 미흡요인·개선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있어 보완 필요
- * **우수** 농진청, 기상청, 통계청 **미흡** 해수부, 경찰청, 행안부
- ※ 기관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는 매년 자체평가 결과에 포함해 대국민 공개 중

사 례 (기상청)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점검 결과

- 성과지표별로 비교적 상세한 설명 제공. 성과지표마다 개념,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방법, 측정산식 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
- 전략목표별 '성과분석'에 있어 소위 '반성' 섹션을 별도로 마련, 전략목표 추진상의 부족한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향후 추진계획'과 연동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 **(기관 성과 달성도)** ※ (신규지표) '22년도 특정평가(주요정책 부문) 결과를 반영
 - 성과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각 기관의 정책 효과성의 제고이므로, 특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관 성과 달성도'에 대한 점수 부여(5점 척도)

구분	장관급	차관급	비고
A	과기정통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3.75점 부여
B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새만금청, 해경청	2.5점 부여
C	국방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인사처, 병무청, 경찰청, 원안위	1.25점 부여

- (제도 운영 우수사례) ※ 행정연에서 각 기관 제도운영 사례 중 최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1, 기상청) 본청-지방청 간 '공동 성과지표' 도입

- 본청과 9개 지방청이 공동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전 조직 차원의 역량 결집 도모

* '호우특보 선행시간'을 모든 소속기관 지표로 선정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해 목표치는 기관별로 설정

** (국정과제 87-6)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 그 결과로 전년 대비 2배 많은 호우특보 선행시간을 확보*했고, 방재관련기관이 집중호우에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여

* 전국평균기준, ('21년) 78분 → ('22년) 152분

- 본청(주무부처)와 시도 산하기관 구조로 이뤄진 타 기관에도 성과지표 체계 설정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우수사례 2, 환경부) 자체평가를 성과보상의 핵심 축으로 전환

- 조직성과 평가과정에서 자체평가의 비중을 확대(40→60%), 성과 관리·자체평가 제도의 영향력을 강화함

- 자체평가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자체 발굴하고, 집중개선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강화 및 평가 환류체계를 확립함

문제점	대응노력	성과
실·국에서 추천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해당 실·국을 다시 평가함으로써 부서간 편차 발생	유사분야별 중분과로 운영 * 6개 소분과 → 3개 중분과	평가위원 편향 해소, 공정성 개선

III

향후 계획

- 점검결과 기관 통보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3.27)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4월 초)
 - 12개 기관 대상, 각 3백만원씩 총 3천 6백만원 지급
- 미흡기관 성과관리 실태 진단 및 컨설팅(4~5월, 행정연 협조)
- '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수립(각 부처) 및 정평위 보고(4월중)

참고 1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
- 설문대상 : 46개 부처 자체평가위원 중 610명
- 설문기간 및 방법 : '23.2.16 ~ 2.23, 전자우편과 문자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내용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현황, 기관장 관심도, 부처의 자체평가 운영 역량 등

◇ **[총평]**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기능하고, 평가의 공정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자체평가 체계 정착

- 다만,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활성화 등 자체평가 결과 환류 보완 및 평가업무 수행 시 수반되는 장애요인 개선 필요

① 자체평가와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자체평가와 관련한 실질적 심의·의결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
* ('18년) 78.8% → ('19년) 81.7% → ('20년) 85.2% → ('21년) 84.9% → ('22년) 82.0%
-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부처에서 최종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수립 등에 충분히 반영했다는 응답 역시 높은 비중 차지*
* ('18년) 79.1% → ('19년) 84.8% → ('20년) 85.2% → ('21년) 84.9% → ('22년) 86.6%
- 대다수가 자체평가 절차가 공정하고(95.3%) 결과가 타당했다고(95.4%) 응답하여 각 부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판단됨

②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 전문가, 부처의 소관 업무 전문가 모두 충분하고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 다수(88.2%, 전년 대비 0.6%p↓)
- 위원회 개최 횟수 역시 효과적 성과평가를 위해 충분하다는 의견이 (82.1%) 전년 대비 상승(5.5%p↑)하였으나 여전히 일부는 부족하다는 의견(17.2%)

③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내용이 부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는 의견이 다수(91.5%, 전년 대비 2.5%p ↑)
- 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높고, 목표치 수준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당해 연도에는 소폭 하락(전년 대비 2.5%p ↓)*했으나 다수 의견으로 나타남
* ('18년) 77.6% → ('19년) 80.5% → ('20년) 83.2% → ('21년) 85.6% → ('22년) 83.1%
- 전략목표 성과지표가 부처 업무성과 제고에 기여하며(88.0%) 부처 핵심 목표를 반영하여 대표성 있게 선정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87.1%)

④ 기관장 관심도

- 기관장이 자체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평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지원했다는 의견이 83.6%(전년 대비 1.3%p ↑)로 나타남
- 자체평가 결과를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기관장이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의견이 79.2%로 기관장 관심도 상승(전년 대비 1.0%p ↑)

⑤ 기타

-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장애요인은 △정량지표 위주의 지표체계(53.1%), △수당·여비 등 노력에 대한 보상 부족(41.6%), △평가 대상 과제수 과다 등 업무부담(30.2%) 순인 것으로 조사*
* '18년부터 5년 연속 1, 2, 3순위 동일
- '자체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받았다'는 응답은 45.1%로 전년 대비 상승(1.1%p ↑)했으며,
* 서면으로 보고받았다는 응답은 31.0%로, 역시 전년 대비 상승(2.3%p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평가결과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에 따라 서면 보고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황 개선 시 자체평가위원회 대면보고 활성화 필요

□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각 부처가 '22년도에 추진한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여 부처 업무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 (평가주체) 총 46개 중앙행정기관 (직제순)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25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보위, 국조실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대상) 각 부처별 '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1,980개
- (평가기간) '22.12월 ~ '23.1월 (평가결과 국조실 제출 : '23.2.3)
- (평가방법) 각 부처 업무특성에 따라 계획수립·집행·성과창출 등 정책 단계별로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
 - 평가지표별로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고, 관리과제에 대해 상대평가
- (평가결과)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관리과제를 상대 등급화(1~7)
- (평가결과 활용) 조직·인사·보수 및 정책개선 등에 반영